

경인지역 대학이 처한 현실과 대안제시로 상생의 길 도모

가천대학교 대회협력처 홍보팀
김혜연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의 관심사들을 논의하며,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감수해야 했던 불이익을 타개할 구심체를 만들게 되었다.

그간 경인지역 이외 모든 4년제 대학들은 7개의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의견을 결집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통로를 가동하고 있었으나 경인지역에서는 총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차에 33개 경인지역 대학들의 중지를 모아 협의회가 창립되었다.

협의회는 경인지역 대학들이 겪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며 대학의 역할 정립과 문제점 타결을 위해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슈진단 및 분석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은 취임사에서 “향후 경기 및 인천지역 대학이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등 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7월, 3차에 걸쳐 임원회의를 열고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안)과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관해 논의하고 의견서를 작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안」에 관한 재고

먼저,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안」에 관해서는 시행령의 모범(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서울·경기·인천으로 규정한 조항을 준용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을 지방대학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수도권 안에서 서울과 기타 수도권(경기·인천지역)의 격차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이라는 용어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가리키며 국가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을 수도권 이외의 대학으로 규정하여 경기도 및 인천지역 소재대학들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 측면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대학을 신·증설 하거나 학생정원의 증원을 규제해온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방대 육성법에서 경기·인천 지역의 대학을 육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률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보다 서울과 비서울간의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인천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및 취업률 평균지표가 비수도권 대학들보다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후천적 실적과 관련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취업기회를 차별하는 사례는 외국의 경우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중앙행정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기회는 채용비율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대 출신자 채용목표 비율의 하한선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취업기회의 역차별이라는 위헌소지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역간 격차의 실태를 감안할 때, 대졸자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 또는 채용권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도권 대학(특히 취업률이 낮은 경인지역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소지가 높으므로, 시행령에 규정한 비율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제 국회의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났으므로, 경인지역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

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의원을 만나 개별적으로 이를 설명하기로 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일에 경인지역대학총장들이 힘을 모으고, 국회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정원감축은 각 대학의 여건과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계획과 추진 실적을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반영,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정원감축이라는 양적 측면의 접근으로 이해하는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지방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해 교육의 질이 낮아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 대학 신·증설과 정원증원 자율화 조치로 방만하게 양적 확대를 추진해 온 데 주요 원인이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 신·증설 및 학생정원을 억제 당해온 수도권 대학과, 교육여건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 학생정원을 과도하게 늘려온 대학들(전문대 포함)이 같은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평가결과를 대학 구조개혁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해서 학생수 감소와 대학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동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안된 법 시안의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범주 재조정 논의

8월 19일 수원 벨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열린 협의회 정책 세미나 및 제2차 총회에서는 협의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논의된 수도권대학 역차별 현상 및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을 통해 한층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신복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서울 외의 다른 지역을 모두 ‘지방’으로 분류하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교육부만 유독 ‘지방’의 범주에서 경인지역을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대학들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구현하려면 지역간 격차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대학의 범주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교육부 통계를 보면 대학을 ‘수도권대와 지방대(비수도권)’로 나뉘는 때보다 ‘서울소재 대학과 서울이외 대학’으로 구분했을 때 전임교원 비율, 교수 연구비 등 교육여건의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인지역 대학이 지방대학보다 평균적인 교육·연구 여건이 열악한데도 지방대학의 범주에 경인지역 대학들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진단 및 분석

이 자리에서는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각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된 바, 올해 진행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경인지역 대학 사업 선정률은 9.79%에 그치고 배분금액도 8.35%에 불과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구조개혁의 기준이 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있어 경인지역 대학들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서울 소재 대학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므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감행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는 대학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모든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대학의 정원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학생충원에 하등 지장이 없는 경인지역 대학들이 ‘올며 겨자먹기 식’의 정원 감축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ACE), 링크 사업(LINC)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서 정원 감축 실적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의 경우, 교육부는 대학들의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2.5~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다.

인천대, 아주대, 평택대, 안양대 등 경인지역 대학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정원 감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중 인천대는 2017년까지 정원을 7%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원 감축안에 대한 각 대학의 고민은 크다. 인천대 측은 “어느 학과에서 몇 명을 줄여야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이 대학 재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양대 관계자는 “대학 규모가 작아도 기본 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다”며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획일적인 인원 감축은 중·소규모 대학들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경인지역대학총장들은 “경인지역 대학들이 처한 현실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경인지역 국회의원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려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경인지역 대학이 수도권 대학으로 묶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결성된 지 6개월 만에 회원대학들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를 통해 경인지역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며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당초 설립 취지를 실현해 가고 있다.